

민주, 갈등 촉발 전대를 ‘비대위 수정안’ 철회

‘전준위 원안’ 대부분 유지키로
당대표 예비경선 여론조사 30%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도 철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물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촉발한 ‘비상대책위원회 수정안’이 6일 상당 부분 철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

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안’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비대위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100%’로 컷오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우 위원장은 또 비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입하려 한 ‘권역별 투표 제도’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중앙위원회 100%’로 치르고, 최고위원 선거에 권역별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

다가 당내 반발을 샀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비대위 결정에 반대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이 전 당원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이에 따라 당무위를 거쳐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당무위 초반 1시간 정도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어느 의견도 당무위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양쪽 의견을 반씩

섞는 수정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전준위 의견대로 여론조사 30%를 포함하되,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비대위 의견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최고위원 후보 15명으로 여론조사를 돌려 8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고, 변별력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국 정당으로 확대하는 데 민주당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

분히 했지만,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당 구성원들이 제시한 의견 중 일리 있는 것이 있어서 중장기 과제로 설계하자는 것이 표면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당무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만한 사안은 줄여보자는 취지의 정치적 결정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사퇴 뜻을 밝힌 안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이 발휘돼 결과가 나왔으니 연락을 해 보겠다”며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성의 있게 다시 전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은 진행 과정을 원만히 이끌지 못한 제 책임”이라며 “마음을 풀고 수습해서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이뤄지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정부, 코로나 ‘과학방역’ 시험대 올랐다

예측 넘어선 여름 재유행 비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세를 보이며 당초 예상보다 일찍 여름 재유행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행세 진정 국면에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곧 다가올 여름 유행이 그동안 강조해온 ‘과학방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방역 강화책을 내놓는 한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

날 신규 확진자는 1만8,147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9,894명)보다 83.4% 증가했다. 5월말 이후 40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1주일 새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당국은 그동안 유행세가 다소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해왔지만, ‘정체’ 수준을 넘어 여름 재유행으로 향한 ‘반등세’가 시작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행세 감소기에서 문재인 정부 방역의 기본틀을 유지해온 윤석열 정부에 여름 재유행은 그동안 강조해온 ‘과학방역’ 혹은 ‘근거기반 방역’을 보여줄 첫번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의무 격리의 해

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격리 해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조만간 나올 가장 큰 결단은 전국민 4차 접종 실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일상 회복 기조를 이어 나가면서 유행을 줄일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찾아내는 것도 윤석열 방역의 중요한 숙제다.
새정부에서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제시했으나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방역 강화 정책을 판단할 기준과 절차는 만들지 못했다.
정부는 7개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재유행으로 하루 20만명이 넘는 상황이 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치안 장악에 열 올려…무더위 더 상승”

권은희, 행안장관 공개 비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사진)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처라면서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은 재난 소관 부처의 장관”이라면서 “최근 연일 확대되는 폭염 발효 상황에서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사무 장악에 열 올려 무더위를 더 상승시키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는 “치안 사무가 정권마다 달라져야 한

다는 것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 사안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자세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막무가내 막말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 대상으로 이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 않겠다”며 “이 장관이 무너트리려 하는 경찰의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방대 총장 기자회견 무산시킨 ‘교육부’

정부, 지방대 홀대 우려 목소리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모여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교육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 시대’를 내걸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은 여전히 지방대 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대학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대학 총장들이 모여 교육부 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교육부가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초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교육부 브리핑룸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이를 거절당하자 교육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기로 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와중에 박 부총리가 임명됐는데, 부총리 취임식(5일) 하루 만에 기자회견이 열릴 상황이 되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교육부의 반발은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실은 교육부 공무원뿐 아니라 전국국·사립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홍보를 위해 종종 드나드는 곳이다. 총장들의 기자회견 출입을 막을 명분이 없는 교육부는 결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일부 대학을 접촉해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대신 박 부총리와의 비공개 면담을 제안하며 ‘각개격파’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